명칭이 규정짓는 '공공성'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⑪ 같은 돈, 다른 이름



매표소는 사라졌다. 이제 문화유산 보존 비용을 특정 종교를 위한 지원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갈 자산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는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배낭을 메고 산길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풍경 하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매표소에서 돈을 내야 했던 장면이다. 이 갈등은 2022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다. 드라마 속 가상 사찰 '황지사'는 사찰 앞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받고, 사찰을 관람할 뜻이 없었던 통행자는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사람들의 불만은 단순한 오해만은 아니었다. 일부 사찰의 매표소는 사찰 경내가 아니라 등산로나 도로의 길목에 설치돼 있었다. "절에 가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과 통행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은 부당한 통행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불교계 역시 이 문제에 좀 더 일찍 세심하게 안내했어야 했다.

'문화재관람료'가 '통행세'가 되기까지

그러나 그 돈의 공식 명칭은 '통행료'나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관람료'였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문화재 공개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제도였다.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보와 보물, 전통 건축, 주변 숲과 산을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주체이자 생태 지킴이이기도 했다. 이 갈등이 커진 데에는 국가 책임도 있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는 남으면서, 국가가 조정해야 할 문화유산 보존 비용이 사찰과 탐방객 사이의 갈등으로 떠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통행세', '금품 갈취', '현대판 산적'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번졌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다. 개인의 불만이나 댓글이 아닌, 정치의 언어까지 제도적 갈등을 특정 종교의 탐욕으로 번역하면서 문화재 보존의 공공성은 시야에서 밀려났다.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왜 길을 막고 돈을 받느냐"는 질문만 남았다.

'매표소'가 사라지자 '특혜'가 등장

오랜 갈등은 2023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주요 사찰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문객은 사찰 입구에서 직접 돈을 내지 않게 됐고, 기존 매표소는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나 '쉼터'로 바뀌었다.

이제 매표소는 사라졌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존하고 공개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비용 부담의 주체가 방문객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동안 사찰과 등산객 사이에 떠넘겨져 있던 문화유산 보존 비용을 공공 재정이 분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자 언어도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다. 과거에는 사찰이 직접 돈을 걷는다며 '통행세'라고 비판하더니,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자 이제는 '혈세', '특혜', '과도한 예산', '조삼모사'라는 말이 등장했다. 직접 걷으면 '통행세'이고, 국가가 지원하면 '특혜'가 된다. 매표소를 두면 돈을 뜯는다고 비난받고, 매표소를 없애면 세금을 가져간다고 비난받는다. 방식이 달라져도 불교와 관련된 비용은 늘 비난의 언어 안에 놓인다.

입장료 폐지 후에도 문화재관람료 남아
문화재 보존 비용, 사찰 · 탐방객 갈등 돼
정당한 지원에도 불교 관련 예산엔 비난
세계청년대회 지원 설명에 '공공성' 부각
불교도 '지원금' 명칭 대신 목적 드러내야

물론 국고 지원이라고 해서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원 금액의 산정 근거와 집행 내역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비용의 성격을 처음부터 '종교 특혜'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면, 그것은 특정 종교의 사익만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웃 종교 행사는 어떻게 '교류'가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바라보게 된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국의 가톨릭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다. 조례안의 비용추계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합쳐 약 972억 원 규모가 거론됐다. 아직 확정 예산은 아니지만 공적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국제행사라면 안전, 교통, 숙박, 급식, 의료 등에 공공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 지원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원을 설명하는 '언어'다.

세계청년대회는 공식적인 설명 속에서 단지 '가톨릭 신앙 행사'로 머물지 않는다. '세계 청년들의 교류', '국제적 위상 제고', '관광산업 활성화', '경제적 파급 효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말들이 대회를 둘러싼다. 종교 행사는 국제행사로 확장되고, 신앙 공동체의 모임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문화적 투자로 번역된다.

이러한 설명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이 서울을 방문하면 관광과 문화교류, 지역경제에 일정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 행사의 외연을 사회 전체의 공공성으로 넓혀주는 언어가 '모든 종교에 똑같이 허용되고 있는가'이다.

같은 세금에 붙는 서로 다른 이름

불교의 문화재 보존 비용 역시 관광과 지역경제, 문화유산 향유,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공적 효과를 지닌다. 사찰이 관리하는 국보와 보물, 전각과 숲은 불교 신자만의 종교적 재산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용을 설명하는 언어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특정 종교를 위한 시혜적 지원금이 아니라, '천년 문화유산 보존비'이자 '국민 문화향유를 위한 공공비'이다. 오래된 전각과 불화, 탑과 경전을 지키는 'K-헤리티지 보존 투자'이며, 사찰림과 산사 주변의 생태 환경을 돌보는 '전통 경관·생태 보전비'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관광을 떠받치는 '지역문화기반 투자금',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온전히 넘겨주기 위한 '미래세대 문화자산 기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돈을 받는 행위' 뒤에 가려져 있던 비용의 실제 목적을 다시 드러내는 말이다. 명명하는 이름이 달라지면 사고와 태도도 달라진다. '지원금'이라고만 부르면 특정 집단에 돌아가는 돈처럼 보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투자'라고 부르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보인다. '종교 예산'이라는 말은 수혜자를 앞세우지만, '국민 문화향유 비용'이라는 말은 그 혜택을 누리는 시민을 앞세운다.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떤 비용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게 만들기도 하고, 특정 집단만의 이익으로 보게 만들기도 한다.

사라진 매표소, 새로 세워야 할 언어

매표소는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 남은 말도 바뀌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보존해 온 비용을 특정 종교에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물려받고 함께 지켜야 할 자산에 대한 투자로 말해야 한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단지 어느 종교에 얼마가 지원되느냐가 아니다. 왜 누구의 공공성은 쉽게 발견되고, 누구의 공공성은 좀처럼 이름을 얻지 못하는가. 우리는 어떤 비용에는 미래와 교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다른 비용이 지켜온 역사와 문화와 생태의 가치는 왜 충분히 말하지 않았는가. 같은 비용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예산서의 숫자만이 아니다. 그 숫자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언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일일시호일

가족 위해 버틴 13년 한국살이, 신장암 앞에 멈춰
"다시 일해 아내와 두 아들 돌보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만줄라 씨, 홀로 한국서 생계 부양
병원비 4000만 원…앞으로 치료도 큰 부담
한 가정 무너지지 않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